용혜인 청문회도 못 잡았다… 野 공세에 與서도 '사퇴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여야 이견으로 일정 미확정
靑 "청문회 거쳐야"… 원칙 고수
오는 22일 청문회 법정 처리 시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후임으로 기본소득당 현역 의원인 용혜인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야당이 각종 논란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당 일부에선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 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용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고 입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5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검증을 받는 가운데, 용혜인 후보자의 청문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8일에 열어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21일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도 공직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도 가장 후순위에 열리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직 유지 입장 ▲언더조직 성차별 논란 ▲사당화·가족 정당 논란 ▲유령 시·도당 사무실 의혹을 주로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 시 비례명부 후순위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던 전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소속 의원이 1명인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겸직 논란에 대해 "연합정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타 정당 소속 의원이 현 정부의 장관이 되어 연합정치의 새로운 면모에 도전하는 점에 더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해명을 내놨다.

과거 용혜인 후보자가 활동했던 정당 내 비선 조직인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행태가 만연했고 조직 내 영향력이 있던 용 후보자가 이를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당시 언더조직엔 혼전 순결, 낙태 금지, 연애 금지 등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다는 당시 활동가에 의해 폭로됐다.

용 후보자와 함께 활동했던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같이 속했던 그룹 안에서 사실은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이야기가 어떤 때보다도 필요했을 때, 가장 중요할 때, 용 후보자가 입을 다물었고 성차별주의자들의 편에 사실상 섰고 가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비선 조직이 아직도 기본소득당 내에서 운영되냐는 물음에 "적어도 이제 기본소득당이 실현되고 창당하고 이후에 그런 조직은 없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와 배우자 중심의 가족 정당으로 운영돼 왔으며, 의원실 보좌진이 당직에도 인선되는 등 회전문 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소득당은 배우자의 당 내 활동과 보수 지급은 당 내 숙의와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고, 의원실 보좌진의 당직 인선 역시 정당 역량 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도당 사무실을 당원의 집이나 농장에 둬 '유령 사무실' 아니냐는 지적엔 "사무실 월세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청와대는 전날(8일)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청와대는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승원 '신약로비' 놓고 정기국회 첫 격돌

〈법무부 장관 후보자〉

與 "수사자료 유출 경위 조사해야"
野 "기소유예 무죄 아냐, 전면 재수사"

국회가 9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과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잔존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주가 조작'과 연관돼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와 지휘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부 사례가 공익 제보로 포장돼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한 의원은 녹취록의 일부만 짜집기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 검찰의 여론 재판 수법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옮겼다. 비공개 수사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철저히 따져봐야 누가 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을 반출해 어디에 보관했고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의원의 질의에 "만약에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됐다면, 그리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관계 기관으로 해서 제출 경위와 그리고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는 (신약 로비 의혹이) 주가 조작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KH필룩스라고 들어봤나. KH필룩스가 김 후보자가 청탁 전화한 제넨셀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다. KH필룩스는 KH그룹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에 나오는 배상윤 회장이 있는 KH그룹의 계열사"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제청할 때 불기소 이유서 읽어봤나"라며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 이 사람 괜찮다고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 알았나. 몰랐나"라며 "기소유예가 무죄인가.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공소제기를 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주가 조작에 문제가 있다.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을 읽어보면 함부로 (장관에)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면 재수사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李 "한·프랑스 강점 결합… 새 시장 창출"

파리서 한·프랑스 주요 기업인 만나
AI·양자·모빌리티 '미래산업 동맹'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과 프랑스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경제인협회와 프랑스 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주요 기업인과 정부 고위 인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와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고, 이를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AI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전략적 투자협력 추진과 함께 네이버와 미스트랄 AI가 소버린 AI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공유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스트랄 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삼성전자 반도체 노하우 보호가 가능한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인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역량, AI 인프라를 결합할 경우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프랑스가 전력망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S와 효성의 첨단 전력기기 분야 강점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관련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지원사격

전북서 최고위원회의·예산정책협의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오는 2035년까지 전북 새만금에 AI(인공지능) 로봇 제조, AI 데이터 센터 등 총 9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을 찾아 이를 뒷받침할 입법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9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지역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지금까지 적극 지원하고 속도를 냈듯 앞으로도 속도를 더욱 더 내게 하고 필요로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서 로봇, 첨단 기계, 수소, RE100 등 4대 첨단 부분이 전북 새만금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현대자동차는 단순한 무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 피지컬 AI 솔루션에 있어서 이제 AI 시대의 가장 높은 단계의 실용 단계인 로봇 및 피지컬 AI 솔루션의 세계 제1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모두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고 동일한 연장선에서 현대차도 피지컬 AI 솔루션 세계 1위 기업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靑, 호르무즈 파병설에 "결정된 것 없다"

〉〉1면 '韓-프랑스, 군사·안보'서 계속

만 양 정상은 '파병'이 아니라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호르무즈 파병이 의제는 아니었다"며 "우리의 검토 단계에 맞춰 해협의 안전 및 통항 문제에 대한 기여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양국의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 종전보다 더 나아가 검토된 건 없다"고 했다.

양국 간 문서로 채택되거나 협의 중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한 조처 아니냐는 지적에도 "군사비밀보호협정은 오래전부터 개정을 준비한 것이고, 군수지원협정도 오랜 현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병에 대해)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실사단 파견도 파병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했다.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파병 준비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호르무즈에서의 국제적 공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